

요 르 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89천 km ²	G D P	336억 달러 (2013년)
인구	7.3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4,583달러 (2013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Jordanian Dinar (JD)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환율(달러당)	0.71 (2013년 평균)

- 아라비아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요르단은 한반도의 1/2 규모의 국토와 약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운송,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발달하여 에너지, 식료품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대외경기 변동에 민감함. 20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이라크, 시리아 등 주변국들의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입헌군주국이지만 국왕에게 통치권이 있으며, 1999년 즉위한 Abdullah 2세 국왕은 군부와 대다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음. 2011년 초 중동 민주화 혁명 당시 반정부 시위가 발발했을 때도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정부는 평화시위를 보장하여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였음.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지역 정치불안 및 내수 저조로 2~3%대 저성장 지속

- 요르단 경제는 2012년에는 FDI 유입과 관광수입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전년(2.6%)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2.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2013년에는 걸프협력위원회(GCC)*의 인프라 투자자금 지원(2016년까지 총 50억 달러 규모) 등 FDI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내전과 그에 따른 난민 유입으로 사회불안이 고조되는 등의 상황으로 경제성장률이 2.8%에 머물렀음.

* Gulf Cooperation Council :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의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 2014년에는 인광석 생산량 증가, Aqaba 항만 공사 등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5%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 상황 등 주변국의 정세 불안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보조금 감축 등으로 개선 전망

- 유류보조금 폐지 등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노력으로 2012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9.8%로 전년(12.7%) 대비 개선되었으며, 2013년에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인상, 전년도 말의 유류보조금 폐지의 효과 등에 힘입어 동 비율이 8.2%로 하락하였음.
- 2014년에는 전력 보조금의 추가 감축과 정부의 조세 수취 증대 노력 및 경제성장률 향상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6.7%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재정적자 보전은 GCC로부터의 무상원조와 양허성차관, 지난 6월 24일 발행한 1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유로본드(미국 정부가 보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차관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총부채(총외채+국내순부채) 규모가 증가하여 2013년 말 GDP의 79.6%에 달하는 등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중해지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조금 폐지로 상승, 2014년에는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하락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에는 유류보조금 폐지,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전년(4.4%) 대비 소폭 상승한 4.8%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공요금 인상 및 보조금의 추가 폐지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5.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14년에는 전력요금 인상 계획 등의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제성장률	2.3	2.6	2.7	2.8	3.5
재정수지 / GDP	-7.4	-12.7	-9.8	-8.2	-6.7
소비자물가상승률	5.0	4.4	4.7	5.5	3.2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부존자원이 미미하고 산업기반이 약한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

- 요르단은 인광석, 가성칼리 등 일부 광물 외에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

- 금융, 부동산, 운송 등 서비스업이 GDP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주로 섬유, 비료, 화학원료 등 원자재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그 외 생활용품과 산업용품 등은 수입에 의존함. 농업 생산량도 미미해 국내 식료품 수요량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2013년): 서비스업(67.0%), 제조업(29.9%), 농업(3.2%)

나. 성장 잠재력

□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하여 지역 내 물류 허브로의 성장 가능성

- 요르단은 홍해 연안의 Aqaba 항을 기점으로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을 커버하는 서부 중동 지역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예산규모 50억 달러의 Aqaba 신항만 및 3개 대규모 터미널(일반 화물 및 자동차용 터미널, 곡물 터미널, 여객선 전용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2014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공공-민간협력(PPP)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중동의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 추진

- IMF는 비대한 공공부문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요르단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음. 이에 Abdullah 국왕은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전력, 석유, 운송 등 부문별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칼륨개발공사(지분의 52% 매각), 인광개발공사(지분의 37% 매각), 국영 항공사 등의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었으며, 국영 정유회사의 민영화 작업도 진행 중임.
 - 전력 부문의 경우 NEPCO(국영 전력공사)는 현재 송전만 담당하며, 발전과 배전은 모두 민영화됨. 단, 발전기업인 중앙전력공사(CEGCO)는 요르단 정부가 49%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외국인투자 유치

- Abdullah 국왕은 자본 및 기술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 개방과 투자 유치를 강조하여, 현재까지 미국, EFTA(유럽자유무역지대), 싱가포르, 아랍 18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음.
- 또한 대미관세면제특구(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및 Aqaba 경제특구(Aqaba Special Economic Zone)를 조성하는 등 투자제한 완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FDI 유입액은 2006년 사상최대치인 32억 달러에서 2012년 15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1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FDI 유입(억 달러) : 28(2008) → 24(2009) → 17(2010) → 15(2011) → 15(2012) → 18(2013) → 20(2014)

□ 에너지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1,000MW급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60%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임(현재 화석연료 비중 95%).
- 또한 2020년까지 전체 전력수요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 아래 2015년까지 Wadi Rum 지역에 150~300MW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까지 매년 10억 달러 이상 유입될 GCC의 인프라 투자 지원금은 주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될 예정임.
- 요르단 정부는 Aqaba LNG 터미널 건설, 이라크-요르단 간 송유관 건설, 셰일 오일(shale oil) 생산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공급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유류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 추진

- 요르단은 IMF의 권고에 따라 유류 및 식료품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공 요금을 인상하는 등 비인기성 정책을 시행하며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12년 11월 유류보조금을 폐지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밀가루 보조금 폐지와 직접 현금지원 방식으로의 식료품 보조금 체제 전환을 발표하였으나 국민적 반발이 강하여 현재까지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
 - 요르단 정부는 기존에 전기요금을 전력생산 비용의 약 60%로 설정해 왔으나, 2013년 8월 15일 정부 부처, 병원, 학교 등 일부 부문에 대해 전기요금을 5~10% 인상하였음.
- 또한 정부는 2012년 11월 각료 인원 감축, 정부 부처 신규채용 보류, 독립 공공기관 예산 15% 감축 등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예산지출 삭감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결정하였음.

3. 대외거래

□ 수입 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에너지와 식료품의 과도한 대외의존은 물론 전자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높은 수입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요르단은 연료 수요의 약 96%와 식료품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여, 경상수지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악화되고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관광수입이 급감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12.0%까지 확대되었음. 2012년에도 유가 상승세 지속, 인광석 생산 감소, 대외원조 수취액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8.4%에 이르렀음.

- 최근 이집트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이집트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게 되자 상대적으로 비싼 석유를 대체제로 수입하면서 상품수지가 계속 악화되었음.

○ 2013년에는 걸프 지역 국가들의 경기 회복으로 동 국가들에 취업한 요르단인 근로자들의 송금액이 증가하고 관광수입이 회복세를 보여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0.0%로 개선되었음. 2014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연료 및 식료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동 비율이 8.4%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외채잔액비중 등 외채관련 지표는 미흡하나, D.S.R은 양호한 수준

○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 감소,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2012년 말 전년 대비 30.0% 감소(78.7억 달러)하였음. 그러나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 등에 힘입어 2013년 말 130.1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6.2개월분)로 증가하였으며, D.S.R도 2013년 말 기준 4.8%로 양호한 수준임.

○ 우방국의 양허성 차관 및 IMF의 차관 지원 등으로 총외채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2010년 75.7%에서 2012년 128.5%로 악화되었으나, 이후 외환보유액 증가로 동 비율은 2013년 84.2%로 낮아졌음.

□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 계속

○ 2012년 8월 IMF는 2011년 중동 민주화 시위 영향 등으로 침체된 요르단 경제의 안정을 위해 3년간에 걸친 20.6억 달러의 대기성차관(SBA) 지원을 승인하고 이후 10.4억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2014년 4월 경제개혁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 하반기 중 2.6억 달러를 추가 지급할 예정임.

- IMF는 상기 검토보고서에서 요르단 정부가 시리아와 이라크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초의 약속대로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제개혁 추진 등을 주문하였음.

□ 미국과 대출보증협약 체결

- 요르단 정부는 2013년 8월 미국과 대출보증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7년간 국채 12.5억 달러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o	2014 ⁱ
경 상 수 지	-1,882	-3,468	-5,694	-3,361	-3,024
경 상 수 지 / G D P	-6.8	-12.0	-18.4	-10.0	-8.4
상 품 수 지	-6,794	-8,819	-10,544	-11,486	-11,250
수 출	7,028	8,006	7,887	7,922	8,469
수 입	13,823	16,826	18,431	19,408	19,719
외 환 보 유 액	12,831	11,242	7,869	13,010	14,375
총 외 채 잔 액	17,129	17,643	18,907	22,238	24,557
총 외 채 잔 액 / G D P	62.3	61.2	61.1	66.2	68.4
D S R	4.5	4.9	5.4	4.8	4.3

자료: IMF, EIU.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Abdullah 국왕에 대한 지지와 통치는 안정적

-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국가임에도 국왕이 외교, 국방, 행정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1999년 즉위한 Abdullah 국왕은 군부 및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패 척결, 행정 투명성 증대, 금융제도 개선 등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2005년 11월 국가 개혁방안인 National Agenda를 발표, 이를 통해 선거법, 정당법, 연금법, 정부 회계 및 사법제도, 노동법 등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향후 10년 간의 국가 개혁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 중임.

- 다만, 요르단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팔레스타인계 이주민에 대한 차별)와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보수주의 세력의 반대 등이 개혁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선거법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로 정치불안 지속

- “아랍의 봄”으로 인해 고조된 정치 민주화 요구에 따라 정부는 2011년 9월 30일 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및 독립된 선거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야권의 핵심 요구사항인 다수당에 의한 정부 구성(의회에서 총리를 선출) 등은 배제되었음.
- 또한, 야당은 의회 선거의 득표율이 실제 의석 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정된 선거법에 이 내용이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
 - 요르단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60명)은 국왕이 임명하며 하원의원(150명)은 선거에 의해 선출됨. 그러나 하원 의석의 과반수 이상이 친 국왕 세력인 무소속 의원(부족 대표)에 안배되어 있어 투표 결과가 의회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현재의 선거법에 의하면 하원 150석 중 108석은 친 국왕 세력인 무소속 의원(부족 대표)이 점유하고 15석은 여성에게 할당되며, 나머지 27석만이 투표에 의해 결정됨.

□ 야당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현재까지 성과 없음

- 2012년 10월 내각 개편 결과 임명된 Abdullah Ensour 총리는 2013년 1월 총선 후 출범한 내각에서도 총리로 재임명되었음. Ensour 내각은 사회안정을 위한 각 정파의 정치 참여를 추진 중이나,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하여 난항을 겪고 있음.
 - 최대 야당인 이슬람행동전선(IAF, 무슬림형제단의 정치적 기구) 등 야권은 개정 선거법에 대한 반발로 2013년 1월의 총선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제도권 외의 정치활동(거리 시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다수당에 의한 정부 구성 등 야당의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요르단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IAF 등 이슬람주의 정당이 정부를 장악하여 지금까지의 실리주의적 외교정책을 폐기함으로써 동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물가 상승 및 생활고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 발생

- 2012년 11월 정부의 유류보조금 폐지에 따른 유가 급등(용도에 따라 14~50%)에 대한 불만으로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말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발생하는 등 생활고와 관련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
- 2014년 4월 22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인 남부 Maan주에서 발생한 무장괴한과 헌병대간 총격사건의 와중에 민간인 1명이 사망하자, 분노한 주민들에 의해 폭력시위가 발생하였음.

□ 인접국들로부터의 지속적인 난민 유입으로 사회불안 가중

- 인접국들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내전 또는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등 물가가 상승하고 보건, 교육, 범죄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라크 전쟁 이후 유입된 이라크 난민 50만여 명 중 30~40만 명이 불법 체류하고 있음. 최근 급증하는 시리아 난민은 2014년 6월 말 기준 약 70만 명으로 요르단 인구의 10%에 육박함.

□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 성과는 미미한 수준

- 정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금자에 대한 학대와 고문, 자의적 체포와 구금, 불투명한 조사 과정, 보안 당국의 신뢰성 부족, 사법절차 관여 등 문제점이 상존함.

- 연금, 사회보장, 상속, 노동, 이혼, 여행의 자유, 시민권 등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며, 특히 명예살인*의 경우 연간 20여 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슬람권 국가에서 집안의 여성이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결혼 등 개인의 자유의지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오빠, 남편 등 가족의 남자 구성원이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악습이며, 대부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음.

□ 토착 요르단인과 팔레스타인계 주민간의 갈등 상존

- 요르단 강 동안(East Bank)에 거주하는 토착 요르단인은 전체 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왕과 군부-부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권력을 장악해 있음.
- 1948년 이후 요르단으로 유입된 팔레스타인계 주민들 및 그 2세대는 요르단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난민 신분이며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무슬림형제단 계열의 이슬람행동전선(IAF)은 1989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약 30%의 의석을 차지한 바 있으나, 2007년 의회 선거에서는 5.4%에 그쳤으며 2013년 1월 총선 참여를 거부한 이후 지방선거 참여도 거부하고 있음.
- 토착 주민과 팔레스타인계 주민간 입장 차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요구도 양극화되어 정치개혁의 방향 설정 및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왕 주도의 정치 개혁 프로그램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
 -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 하층민의 시위는 정치 자유화, 정부기구의 대표성 강화 및 경제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면, 토착 요르단인들은 제도적 특권 유지,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공공 부문 현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임.

3. 국제 관계

□ 미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교류 강화

- 미국은 요르단에 연간 6.6억 달러(경제지원 3.6억 달러, 군사지원 3억 달러)를 정기 지원하는 최대 원조국으로, 2013년 7월 시리아 난민 수용 등 지역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요르단에 3.4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추가 지원, 연간 총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시리아 내전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2013년 6월 요르단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사실상 요르단 주둔 미군을 증강 배치함.
- 요르단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전통적 중립 외교노선에서 친미 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계 주민의 반미 감정이 전보다 더 크게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주변 중동 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GCC 국가들은 요르단의 수니파 왕조를 지지하여 경제적 원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3~16년에 걸쳐 5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함. 다만, 2011년 이슈화되었던 요르단의 GCC 가입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여러 차례의 리스케줄링 경험

- 요르단은 파리클럽과 1989~99년 중 5차례에 걸쳐 총 8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상환을 연기하였으며, 재정적자가 지속되자 2005년에 또다시 총 외채의 17%를 2007년까지 상환 연기한 바 있음.
- 2013년 9월 말 현재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 외채의 조기상환을 실시하는 등 채무상환 태도는 긍정적

- 2007년 10월 요르단 정부는 파리클럽과 총 21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11% 할인하여 조기상환(19억 달러)하는 데 합의하여 2008년 중 상환을 완료하였음.
- 동 조기상환은 요르단의 견실한 경제성장 및 양호한 외채관리 전략 등에 기인한 것으로, 200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민영화에서 발생한 수익 등으로 외채를 상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2. 국제시장평가

□ 2013년 중 주요 기관의 국가신용 평가등급 하향 조정

- OECD는 2014년 1월 개최된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경상수지 적자 지속, 대내외 정치상황 불안정 등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GCC 국가, 미국 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보조금 감축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요르단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전년과 동일한 5등급으로 유지함.
- 반면 S&P는 요르단에 대한 해외원조 감소, 2011~12년 교역규모 축소 및 시리아 내전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근거로 2013년 5월 요르단의 국가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하향 조정함.
- Moody's도 2013년 6월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저조한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요르단의 신용등급을 Ba2에서 B1으로 2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C3 (2013. 9.)	C2 (2012.12.)
OECD	5등급 (2014. 1.)	5등급 (2013. 1.)
S&P	BB- (2013. 5.)	BB (2012. 7.)
Moody's	B1 (2013. 6.)	Ba2 (2012. 2.)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전액 인수 가능하나 신용한도 적용
- 영국 ECGD: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2. 7. 26 (북한과는 1974. 7. 5 수교)

□ 주요 협정: 무역협정(1972), 문화협정(1977), 경제-기술협정(1977), 항공협정(1978),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0), 투자증진-보호협정(2004),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협정(2004), 관광협력협정(2005), 원자력협력협정(2008)

□ 우리나라와의 2013년 교역규모는 1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 감소

-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약 13.2억 달러, 수입은 기타석유화학제품과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약 7천만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3월 말 기준 신규법인수 20건, 총투자금액 1,596만 달러에 불과함. 그러나 최근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한국전력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2년 2월 요르단 국영전력공사(NEPCO)가 국제입찰로 발주한 600MW급 IPP-3 디젤내연발전소(총사업비 8억 달러)의 건설운영사업자(BOO 방식)로 최종 선정되었음.

- 아울러 롯데건설은 본건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총 공사비 5.5억 달러의 발전소 EPC(설계-구매-시공) 계약을 NEPCO와 체결하였음.

- 한국전력은 2013년 1월에도 요르단 광물에너지자원부가 발주한 Fujiej 풍력발전소(총사업비 1.9억 달러) 프로젝트의 BOO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음.

- 2014년 3월에는 한화건설이 요르단 최초의 MW급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인 1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공사대금 2,400만 달러) 건설 계약을 NEPCO와 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요르단 인프라 건설 진출이 계속되고 있음.

< 표 4 >

한·요르단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1~5	주요 품목
수 출	1,396	1,317	669	자동차 및 그 부품
수 입	69	67	36	기타석유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요르단은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부턴 GCC 국가를 중심으로 한 FDI 유입 증가, 관광수입 회복으로 향후 3~4% 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아울러 보조금 폐지 등 재정지출 축소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 완화도 기대됨.
- Abdullah 국왕은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 개혁의 속도가 느리고 변화의 정도가 미진해 야당이 의회선거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잇따른 보조금 폐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사회, 정치적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음.
- 과거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최근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다소 우려됨. 그러나 IMF의 대기성 차관 지원, 낮은 D.S.R 비중,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의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